

News

금융위, 우리금융 지분 10% 매각...사실상 완전민영화

데일리안

예금보험공사,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 15.13% 중 최대 10%를 다수 투자자에게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 예정... 4% 이상 지분 매입 투자자는 사외이사 추천권 인센티브도 제공
그간 진행해온 블록세일이 아닌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 10월 8일 투자자의향서 접수 마감하고 11월 중 입찰 마감 예정... 낙찰시 연내 매각절차 완료

고승범-지주회장, 오늘 첫 회동...가계부채·금융지원 논의

데일리안

고승범 금융위원장, 금융지주의 도움이 필수적인 가계대출 관련 논의 진행 예정... 대출한도와 금리 조정에 대한 이야기 오고 갈 것으로 전망
취임 이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강력한 대책과 함께 협조와 지원 확보 중... 업계는 고 위원장이 각 지주회장에서 가계대출 한도 더 줄여달라고 요구할 가능성 예상

네이버·카카오에 칼 빼든 금융위..."신속한 시정 없을 시 엄정 대응"

한국경제

금융당국, 핀테크 금융플랫폼을 통한 소비자 상품 소개 영업 행위 대부분을 중개로 봐야 한다는 견해... 위법 소지 자체적으로 시정하지 않을 경우 엄정 대응 언급
금융법 제도기간 종료일인 24일까지 해소해야만 정상적 서비스 운영 가능... 그동안 핀테크 업체들에 일관되게 설명된 내용이라 전혀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라는 입장

한국은행까지 '퍼주기' 동원하나

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 한국은행에 은행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채권 매입하라고 요구... 발권력 활용해 자금공급에 나서라는 의미... 준재정정책에 중앙은행을 무분별 동원한다는 비판
중앙은행 자영업자 채권 매입은 주요국 사례가 드물고, 법으로도 금지 중... 통화정책 신뢰도와 국가신용도 훼손 우려 때문

소비자가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한다...금융위,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조선비즈

금융위, 손해사정사 제도 개선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손해사정사 대부분이 보험사 자회사 소속인 것이 관행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 발생비용은 보험사 부담하기로... 입법예고했고 향후 더 많은 부분 개선될 것 언급

보험사도 금소법 내규 반영 시작, 삼성생명 '첫발'

더벨

보험사들, 금소법 시행에 대비해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 관련 내용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반영 시작... 1위사인 삼성생명이 가장 먼저 내규 개정에 나서...
생보협회, 지난달 말까지 업권의 의견 취합 마쳐...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금소법에 대비한 조치... 25일부터 제재 시작

증권사 ISA 가입자수 사상 첫 은행 추월

디지털타임스

증권사 ISA 가입자 수, 사상 최초 은행 가입자 수 넘어서... 올해부터 ISA로 주식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ISA 가입자가 은행에서 증권사로 옮겨간 것이 주요
향후 ISA를 통한 주식 투자에 대해 세제 혜택이 추가로 기대되면서 가입자가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하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증권사 과징금 논란...시장조성자 제도 파행 위기

매일경제

한국거래소, 시장조성 의무 면제 카드 꺼내... 해당 증권사에 패널티 부과해야 하는데 당분간 면제해주겠다는 취지
금융당국 제재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시장조성자 제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 거래위축과 투자자 거래비용 증가 등 부작용 우려 제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